



산재 승인 결정, 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늘어지는
현장조사

업무상질병
판정위원회
심의

사업주 의견서
받는데
또 한 달

각종 자료와
회의

특별진찰,
의료기관
자료 수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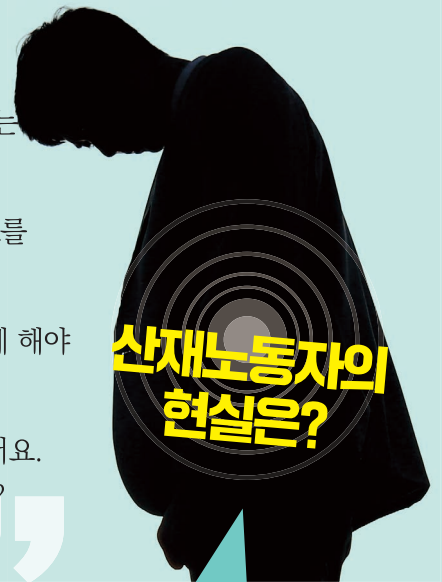
근골격계질환 판정까지 무려

평균 4달

(직업성암 판정 기간 평균 334일)



- ... 병원에서는 한두달은 일하지 말고 쉬라는데, 회사에 두달씩 병가내겠다는 말은 꺼내지도 못해요. 연차내고 병원가는 것도 얼마나 눈치를 주는지...
- ... 진단서 가지고 사장님한테 병가 좀 내겠다고 했더니 아프면 알아서 사표를 써야지 무슨 병가냐고... 결국 회사 짤렸습니다.
- ... 치료비도 내 돈으로 내야 하는데 휴가까지 쓰면 이번 달 생활비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 ... 신청한 지 세 달이 넘었는데 뭐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아무말이 없어요. 내 돈 쏟아부어서 일단 버티고 있긴한데 이리다 불승인하면 어떻게하죠?



산재노동자의 현실은?

배짱 좋게 병가? 병가는 곧 하고

노동자가 일하다 병에 걸리더라도 법적으로 병가 휴가를 보장하도록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병가를 줄지 말지는 사업주 마음입니다. 더군다나 근골격계질환의 경우 치료 기간은 2~3달 이상 길어질 수 밖에 없는데, 필요한 치료 기간을 병가로 보장해주는 사업주는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 병가를 내려고 하면 아픈몸으로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겠냐는 이유를 들어 사직을 강요당하기도 합니다.

치료비도, 생활비도 알아서 해결해

산재보험은 노동자가 산재로 승인받으면 치료비를 보장하고, 치료를 위해 일하지 못한 기간 휴업급여도 지급합니다. 하지만 승인 결정이 나기 전까지 노동자들은 치료비를 개인이 부담해야 하고, 병가를 낸 경우 무급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생활비도 막막한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개인 대출과 카드빚으로 치료비, 생활비를 메꾸지만 승인 판정 기간이 길어질수록 노동자가 감당하기 어려운 생계고통을 겪게 됩니다.

치료 포기... 악화되는 질병, 골병드는 몸

해고 압박과 생계곤란으로 산재 노동자들은 필요한 기간 동안 안정적인 치료를 받지 못합니다. 의사가 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한 기간마저도 회사에 출근하면서 겨우 치료를 받고, 그 이후에는 치료를 더 받을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일하다 질병에 걸렸지만 똑같은 일을 하면서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한 노동자들의 질병은 결국 악화되고, 노동자는 회복할 수 없는 골병에 걸리고 맙니다.



신속한 산재 결정, 어렵지 않아요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규칙 21조 근로복지공단은 요양급여 신청을 받으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요양급여를 지급할지 여부를 결정해 알려야 한다.

시행규칙 8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심의를 의뢰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심의를 의뢰한 소속 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법대로, 목적대로, 제대로 하면 됩니다!

현장조사 신속 처리

코로나 핑계, 인력부족 핑계로 몇 달씩 걸리는 현장조사. 10일 내에 제출하게 돼 있는 의견서를 고의로 미루는 사업주들, 사업주에게 몇 번씩이나 공문을 보내 의견서 제출기간을 늘려주는 근로복지공단. 늦어지는 현장조사 이대로는 안됩니다.

추정의 원칙 전면적용 및 대상 확대

매우 협소한 질병과 업무로 한정하고 있는 추정의 원칙. 하지만 그 어려운 바늘구멍을 뚫고 대상이 되더라도, 또다시 심의회의를 거쳐야 승인여부를 결정. 이미 온몸에 골병이 들대로 든 노동자가 산재를 신청하면 추정의 원칙 대상이더라도 상병명이 여러개면 해당 안됨. 추정의 원칙 전면적용하고, 대상을 확대하면 됩니다.

판정위원회 심의건 최소화

재해조사가 끝나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심의회의를 열고 결정하는데 까지도 몇 달. 업무와 연관성이 명확하다고 이미 확인된 질병은 판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승인 여부를 빠르게 결정하면 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상 심의제외 대상을 확대해 판정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산재건을 줄이면 됩니다. 지연되는 판정위원회 심의 기간 이대로는 안됩니다.

인력 확대 및 시스템 개선

산재 신청 건이 많아져서 처리가 늦어진다고 핑계되는 근로복지공단. 현재 시스템으로 산재처리를 제대로 할 수 없다면 더 많은 노동자들이 제대로 산재보험의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인력 확대 및 시스템 개선을 해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
신속 · 공정한 산재처리 없이
노동자들의 희망버팀목이
될 수 없습니다!**

